"GPT가 병원 가보래서"…'AI 맹신' 의사-환자 갈등 키운다

증상 검색 넘어 진단·병원 방문 판단

처방·치료 방식 놓고 의료진과 이견

잘못된 자가진단·치료 지연 우려도

의료계 "임의로 약물 복용 결정 안 돼"

#전남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A씨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치료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환자를 마주했다. 염증 수치가 높아 항생제를 투여받던 환자가 AI 답변을 토대로 위장약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이다. A씨는 환자에게 약물 투여 이유와 치료 과정을 다시 설명해야 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 환자가 AI에서 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혈압이 높으면 수액 주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B씨는 실제 치료 방식과 AI 답변이 엇갈리면서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 추가 설명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C씨는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기 전 챗GPT부터 찾는다. 증상과 지속 시간을 입력해 의심 질환과 병원 방문 필요성을 묻는다. AI가 진료를 권하면 병원을 찾고, 경과를 지켜봐도 된다는 답변이 나오면 방문을 미루기도 한다.

생성형 AI로 건강정보를 얻고 진료 여부까지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의료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답변을 맹신하면 잘못된 자가진단이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환자들이 AI에서 얻은 정보를 진료 과정에서 언급하거나 처방·치료방법에 관해 질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증상을 검색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찾았다면, 이제는 AI에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질환부터 치료 방법, 병원 방문 여부까지 묻는다.

챗GPT 등 생성형 AI는 질문에 맞춰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추가 질문도 가능해 기존 검색 방식보다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병원 방문 전 증상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보는 용도로 활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할 뿐,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같은 증상이라도 나이와 기저질환, 복용 약물 등에 따라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AI 답변만으로 질환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답변 역시 실제 건강 상태와 동떨어질 수 있다. 그럴듯한 설명도 의학적으로 정확한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I가 심각한 질환 가능성을 제시해 불안감을 키우거나, 반대로 증상을 가볍게 판단해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의료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환자가 AI 정보를 근거로 처방이나 치료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료진이 추가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답변과 실제 진료 결과가 다르면 의료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반면 AI 정보를 의료진과 공유하면 궁금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건강상담 과정에서 병력이나 검사 결과 등 민감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AI를 통해 질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답변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치료가 달라지는 만큼 AI가 제시한 내용을 맹신하거나 임의로 약물 복용과 치료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윤찬웅 기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이음 축제 1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이음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랑구르 부르자(네팔 전통 주사위놀이)를 체험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금속노조 "현대삼호 노동자 사망…사측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밀폐공간 인정·작업중지 명령 촉구

안전수칙 미준수·당국 대응 비판

유족 "장례도 못 치러" 눈물 호소



HD현대삼호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하청 노동자의 유족과 노동단체가 사고 발생 8일째가 지났으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사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을 밀폐공간으로 인정하고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앞서 지난 3일 HD현대삼호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부 탱크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27세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여동생은 "오빠가 허리 한 번 펴보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서 숨졌는데 왜 사과를 들을 수 없는지 모르겠다"며 "부모님이 두 다리 뻗고 잠이라도 잘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오빠를 편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노조는 사고 장소가 선박 탱크 내부 폭 80㎝ 내외의 협소한 공간으로, 경사면을 따라 약 2m 아래로 움푹 꺼진 구조여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인의 체내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수치와 청색증이 확인됐으며, 사고 전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작업허가서와 사내 안전표준에 출입카드 부착, 감시자 지정, 산소농도 측정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2인1조 작업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이 여러 개의 개구부가 있다는 이유로 밀폐공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국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지난 9일 목포고용노동지청과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밀폐공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당국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사고 선박은 진수됐다"며 "위험성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중지 조치마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과 선박 내부 탱크 특별점검, 원·하청 사업주의 책임 규명 및 엄중 처벌,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윤찬웅 기자

8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구속 송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안해…음주 혐의 제외

경찰, 술 2병 마신 CCTV 영상 첨부해 송치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확인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면허정지 수준 이상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30대)씨도 도주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57분께 전남광주 동구 동명동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잠적한 A씨는 다음 날 오후 자진 출석했다. 동승자 B씨는 사고 당일 오후 화순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려 했으나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승자 B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과 사고 전후 동선 추적 과정에서 술집 CCTV 등을 확보해 음주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한 위드마크 공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A씨가 사고 당시 면허정지 수준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A씨가 사고 전 2병 가량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관련 증거로 첨부해 송치하기로 했다. /오지현 기자

교도소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수용자 2명 추가 징역

교도소 안에서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한 수용자 2명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유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25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1알당 1만원에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약품을 화장지에 감싼 뒤 수용실 창문 밖으로 던져 주고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장면이 목격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밀 신체검사에서 약물 복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오지현 기자



